팩트체크+ 보고서		미디어연대 The Media Network for Justice
2020-3주차	발행일: 2020년 1월20일(월)	www.medianetwork.kr
연락처	(02) 741-7662 (유은실)	FAX (02) 741-7663
참여위원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조충열 황우섭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3주차)

ㅇ 대상 매체·프로그램 :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JTBC뉴스룸
ㅇ 대상 기간 : 2020년 1월 13일(월) ~ 2020년 1월 19일(일) 7일간
ㅇ 참여 위원 :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ㅇ 보고서 발표일 : 2020년 1월 20일

차 례

Ⅰ. KBS, MBC 보도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례 3건 ·····2

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왜곡·편향 방송사 여론조사 보도 심의조치 1년간 내역 전수 조사 ·····7

Ⅲ. KBS의 정치 편향적 · 한미동맹 저해 소지 보도 ·····9

Ⅳ. MBC의 해리스 美대사 일방 비난 무책임 보도 ·····12

Ⅴ. 'JTBC 뉴스룸'의 정치편향·反美적 보도 ·····13

* 참고 말씀 ·····17

Ⅰ. KBS, MBC 보도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례 3건

1) '보수야당 심판론' 보도한 KBS, 여론조사 가장한 여론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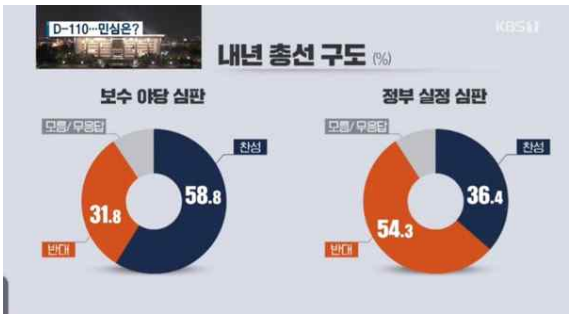
▶방송 : 2019.12.27. KBS <뉴스9>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 20대 셋 중 둘이 부동층'
▶바로가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1581

(가) 방송내용

○ 2019년 12월 27일 KBS <뉴스9>에서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다가오는 총선이 '보수야당 심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것으로, 질문에 "내년 총선에 자기반성 없는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반면, 정부 여당 심판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피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한다"는 질문지가 들어있다.

○ 취재기자는 조사결과 내년 총선 구도에서 "'보수 야당 심판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 반대한다가 31.8%였는데, '정부 실정 심판론'은 찬성 36.4%, 반대 54.3%였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앵커도 "정부의 실정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 팩트체크

○ 이 보도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조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당시 KBS 여론조사 공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KBS 조사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여당ㆍ정부 심판론보다 20%p 이상 (높았다), 거의 더블이 됐다”며 해당 보도를 적극적으로 인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여론조작은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지난해 12월 27일 KBS가 보도한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의 두 질문 즉, “내년 총선에 자기반성 없는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피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한다”는 질문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두 질문의 단어 선택이나 구조에서 어감의 차이가 있고, 질문의 균형이 맞지 않아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야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목만 잡는’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으나, 여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피하기 위한’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 ‘자기반성 없는’이나 ‘정부의 발목만 잡는’ 등의 표현은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설문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참고사항

○ 여심위는 지난해 12월 27일 KBS가 보도한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13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

○ 그리고 이 여론론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KBS 또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BS는 여론조사의 감리를 철저하게 해

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 ‘15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작자는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표본은 올바로 추출하는지, 실제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감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거관련 조사의 경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가 끝난 뒤 조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인수하여 여론조사 사후 감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상)

2) MBC ‘비례자유한국당’ 관련 보도, <방송심의에 과한 규정>과 <공직선거법> 위반

▶방송 : 2019.01.09. MBC <뉴스데스크>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
▶바로가기 : 삭제되어 있음.

(가) 방송내용

○ 1월 9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 리포트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니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통화 연결 안내음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안내음 자체가 없다. 처음부터 안내음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팩트체크

○ 이 보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규정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반된다.

○ 또한 이 보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 이 보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을 넘어 ‘조작 방송’까지 했다고 판단된다. (이상)

3) KBS ‘민생법안’ 보도, 교묘한 영상편집 기법의 공정성 위반

▶방송 : 2020.01.14. KBS <뉴스9> ‘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

▶바로가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51

(가) 방송내용

○ 앵커는 “우여곡절 끝에 어제(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됐지만, 국회엔 여전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법안들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 이어 기자는 “국회엔 여전히 만 5천 개 넘는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보도했다.

○ ‘존경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살려주십시오’ 피켓을 든 시위자 관련 영상을 보여준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터뷰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를 편집했다.

○ 그리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 과거사법 처리해주세요. 사람 목숨이....’라고 피켓을 들고 울면서 법안처리를 호소하는 여성 관련 영상 다음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 인터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로 이어지는 영상을 편집했다.

(나) 팩트체크

○ 국회가 민생법안를 처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했다. 리포트할 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어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관련 국회 영상을 보여주었다.

○ "방송은 제작기술이나 편집기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특정집단을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③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끝.

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왜곡·편향 방송사 여론조사 보도 심의조치 1년간 내역 전수 (2019.1.21~2020.1.20)

: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가 심의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기준 준수 촉구, 또는 경고 결정을 내린 사례는 총 43건. 이중 방송사들의 위반건수만 18건으로 42%나 차지, 국민에 대한 영향이 큰 방송사들의 자의성·편향성에 의한 여론 왜곡·오도의 우려가 크며 특히 총선이 다가 온 지난해 8월부터 위반사례가 집중되고 있어 철저한 감시와 상응 책임 조치가 요구됨.

[방송사들의 지난 1년간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 법규 위반 사례 전수]

(조사의뢰 방송사/조치결정일/선거여론조사명/선거여론조사기준 등 위반내용 순)

▶[KBS] 2020-01-08 / 전국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및 현안 / 제4조1항(신뢰성과 객관성 위배),제6조1항(특정 정당에 부정적 이미지 유발하는 질문지 작성 등)

▶[KBS] 2020-01-08 / 서울특별시 전체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및 현안 / 제4조1항(신뢰성과 객관성 위배),제6조1항(질문지의 작성의 편향성)

▶[MBC광주 등] 2019-12-30 / 전라남도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CBS대구 등] 2019-11-26 / 전국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CBS대구 등] 2019-11-26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가상대결 지지도, 자유한국당 후보적합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CBS대구 등] 2019-11-26 / 대구광역시 동구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가상대결 지지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CBS대구 등] 2019-11-26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가상대결 지지도, 자유한국당 후보적합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CBS대구 등] 2019-11-26 / 경상북도 구미시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가상대결 지지도, 자유한국당 후보적합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KBS광주] 2019-11-25 / 광주광역시 전체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현안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KBS청주] 2019-11-25 / 충청북도 전체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의정활동 평가, 투표의향,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후보 정당,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한 후보 정당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TJB대전방송] 2019-11-25 / 전국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TJB대전방송] 2019-11-25 / 대전광역시 전체 대전광역시 전체 대전광역시 전체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KBS청주] 2019-11-25 / 충청북도 전체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기타 국정운영평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KBS광주] 2019-11-25 / 전라남도 전체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현안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YTN] 2019-10-17 / 기타(정당지지도 주간집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SBS] 2019-09-26 / 전국 전체 정기(정례)조사정당지지도 국정현안 의견 조사 / 제6조3항(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 위반)
▶[SBS] 2019-09-26 /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대통령선거 국정현안 의견 조사 / 제6조3항(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 위반)
▶[KNN부산경남방송] 2019-08-05 / 부산광역시 전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 공직선거법 제96조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

Ⅲ. KBS의 정치 편향적 · 한미동맹 저해 소지 보도

분석대상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도

14일 톱기사 연속 4건.

●美론스타 펀드 관련 보도.

15일 3건 헤드라 1건, 16일 3 해드1, 17일 2 해드 1.

총 8건 해드 3건.

●美 대사 해리 해리스 관련보도.

16일 1, 17일 1, 18일 1.

총 3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도

: 톱기사로 4꼭지나 연속보도하면서 비판적 시각은 전무한 채 일방적 전달. 마지막 기사 끝에 짧은 두 문장의 야당 비판 발언을 구색 맞추기용으로 붙임.

2020.01.14. 문 대통령 “검찰 초법적 권력 누려…조국에 마음의 빚”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36
2020.01.14. “北 대화의 문 안 닫아…남북·북미 대화 비관 단계 아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39
2020.01.14. “급등지역 부동산 값 원상회복 돼야…경제 긍정적 지표 늘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41
2020.01.14. 100분간 묻고 답했다…‘협치 내각’ 가능할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42

● 정치적 의도 소지가 있는 과다한 론스타 펀드 관련보도

: 3일에 걸쳐 헤드라인 톱뉴스 모두 8건이나 보도. 보도 가치는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과잉 보도로 이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일 소지가 있음.

2020.01.15, 해드라인, **〈5조 원대 론스타 분쟁 문서 입수, 진실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198#
〈5조 원대 론스타 분쟁 문서 입수…“실제는 1조 원 안팎”〉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198#
〈분쟁가액 5배 ‘뻥튀기’…론스타 속셈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201#
〈“정부 대응에 문제”…론스타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202#

2020.01.16, 해드라인〈금융 당국, 분쟁 각하 '결정적 논리' 외면 정황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975#

〈론스타 '산업자본' 논점 없어…"각하 기회 스스로 포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976#

〈론스타 '산업자본' 왜 뺐을까? "모피아 책임회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978#

〈"론스타 약점은 산업자본…정부의 포기로 분쟁 전망 어두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980#

2020.01.17, 해드 라인 **〈재판 중 매각 승인 시도…'징벌 매각' 왜 없었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4670

〈2008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시도…누가 했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4671#

〈론스타에 손 들어준 금융당국…"징벌 매각 권한 내 있었지만 안 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4672#

●론스타 론스타 펀드 관련보와 美 대사 해리 해리스 관련보도의 논점

1)'지구촌 역할에 따른 '지구촌' 표준(global standard)의 관점이 필요하다. 지구촌 역할'(universal roles)은 3가지 주요 요소로 풀이된다. 동기가 합당할 때에만 업적(achievement)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합당한 것(universalism)이어야 하고, 그리고 구체성(specificity)를 지녀야 한다(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The Free Press, 1951, p.192). 그게 '지구촌' 역할의 요소이고, 그 역할은 역할 기대가 따르고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지구촌' 표준(global standard)이 형성된다. 그건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자연법세계이다. 우리는 OECD 국가이다. 그걸 세계는 우리에게 요구한다.

1)해리 해리스 보도. 보도가 퍽 개인적 폄하에 가깝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 개별여행과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는 제재에 대한 실제적 논의를 끌고가지만, KBS보도는 해리스 개인에 관한 것을 부각시킨다. 물론 BBC, CNN이 그런 이슈를 잡아도, 그건 제목으로 다룰 때 문제가 있다.

①방송법 제32조, 제1항의 심의규정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문 대통령 대북 구상에 또 어깃장'

'동맹국 대사에서 '콧수염' 논의를 한다.

이런 보도는 업적에 대한, 이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시비거리 보도이다, '공공성'에 멀러 떨어져 있는 보도이다.

일본 동맹에게 하는 '종족적 민족주의' 논의가 다시 등장했다.

방송심의 규정

제20조 명예훼손 금지①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는 “남북 협력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하고, 우리의 헌법은 북한을 여전히 국가로 인정하지 있다. KBS보도는 어깃장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객관적 국제적 표준의 관점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 KBS보도 내용이 세계인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엄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나중 안보리 제재로 뒷감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론스타 펀드 문제.

KBS가 탐사보도를 한 것은 잘 한 것이다. 그러나 잣대가 명료해야 ‘공정성’, ‘공공성’ 등이 명확할 수가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전지전능할 수 없다. 모든 잣대가 전 교수에게 의존할 수 없다. 그 관점은 노조와 정부의 비판과 더불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론스타 펀드는 국제감이 없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불행이다. 분석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비리의 집합체이다.

미국 로스타 기업은 헐값에 사서, 4조 6천 억 원을 벌어갔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회사에는 강성노조를 갖고 있었고, 정부는 뒷감당이 되지 않으니, 팔아버린 것이다.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등이 중국에 넘어갔던 것도 정치권력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도 지구촌 표준에 감이 없었고, 모피아. 금융감독원, 법원 등도 지구촌 표준에 익숙하지 않았다. 물론 국제법은 강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은 만들어지면, 약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론스타 문제는 대법원도 관련을 맺지만, 워성턴 중재판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론스타는 산업 자본인데, 금융업에 투자를 했다. 돈이 필요하니, 국내법도 어기도 민주화 정부가 론스타를 끌고 온 것이다. 정치인의 떡고물 논쟁도 한 몫을 했다. 당시 KBS가 보도를 할 했을 이유가 없었다.

●美 대사 해리 해리스 관련보도.

2020.01.16. 〈북미 긴장고조, 해리스 美 대사, 문 대통령 대북 구상에 또 어깃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4006#

2020,01.17.〈靑, 해리스 美 대사 발언 “대단히 부적절”…한미갈등 불씨되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4673#

2020,01.17.〈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큰 신뢰”…“논란된 콧수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5019#

Ⅳ. MBC의 해리스 美대사 일방 비난 보도

: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한다는 핵심 맥락과 북핵의 근본 문제는 쏙 빼놓고 일방 비난을 하면서 미국 국무부도 해리스 대사의 잘못이라고 시인한 것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알려졌습니다.) 보도. 공영방송으로서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함.

[2020-01-17} 靑, 해리스 美 대사에 경고…"대북정책은 우리 주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898_32524.html

[2020-01-17} 文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논란의 '해리스' 발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899_32524.html

[2020-01-17} 韓美 '대북정책' 미묘한 입장 차 표출?…속내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900_32524.html

[2020-01-18] 해리스 직설 화법 탓 '와전'…美 "한국 결정 지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2132_32524.html

Ⅴ. JTBC의 정치편향·反美적 보도

제목 : JTBC 뉴스룸 모니터 보고
에디터 :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내용 : 주간 방송보도 (2020. 1. 13~1. 19) 3주차 모니터

● 친문 정권 비호 및 총선개입 소지 다분한 보도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비판 일체 없이 미화 보도만

: 정권 비리 수사방해용 검찰 인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 미화, 미북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부동산 폭등의 현 정권 책임 등과 같은 일체의 비판이나 팩트체크는 전무한 채 일방적 미화 보도

- 문 대통령 "수사권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 쐐기 (1/14)
- "조국 고초, 마음의 빚…정치권 갈등 조장 옳지 못해“ (1/14)
- "북·미 대화만 쳐다보지 않겠다"…돌파구 모색 의지 (1/14)
- 문 대통령 "집값 급등지, 원상회복돼야"…강력대책 예고 (1/14)
- 퇴임 후 질문엔 "잊혀진 사람 되고파"…107분 회견 어땠나 (1/14)

▶ 고민정도 출마 가닥…'청와대의 입' 3명 총선 선거판에 (1/1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391&pDate=20200113

(청와대 대변인 출신3인 (박수현, 김의겸, 고민정)의 총선 출마 소식 보도. 청와대 출신 3인은 모두 각각 비례대표 공천설, 부동산 투기의혹, 울산시 공작선거 해명 논란 등 각종 의혹과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킨 보도. 리포트에 등장한 시민 3인 인터뷰도 “신뢰가 간다”는 등의 긍정적인 발언만 방송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총선 홍보용으로 전락한 방송.)

▶ 총리 퇴임 후 더 바빠진 이낙연…내달 초 종로구 '입주' (1/1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632&pDate=20200114

(뉴스룸의 이낙연 띄우기 계속. 전직 총리에 관한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총선 지역 출마 예상 지역구 전셋집 구입 등 자잘한 출마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총선 개입형 보도로 볼 수 있다)

▶ 청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매매허가제까지 거론 (1/15)

(강기정 정무수석의 ‘매매 허가제 도입’ 등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851&pDate=20200115

▶ '조국 보좌관' 김미경 변호사, 균형인사비서관 내정 (1/15)

(여전히 조국을 수호하는 뉴스룸. 조국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미경 변호사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내정된 소식 보도였다. 김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법무행정관으로 근무함. 김 변호사는 조국 보좌용 자리를 계속 거쳐옴. 오직 조국을 위한 인사용임에도 뉴스룸은 “청와대는 법률가로서의 공정성 등을 높이 사 김 변호사를 내정했단 입장”이라며 청와대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안 돼"…'위성정당' 당명 제동 (1/1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393&pDate=20200113

(한국당의 대체 당명 소식 전하며 야당 비판으로 마무리한 보도.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오늘도 선관위 결정을 반기며 한국당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정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애초 연동형비례제라는 민의를 왜곡하는 꼼수법안의 문제가 원인이었음에도 제1야당이 마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꼼수나 부린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한 보도였다.)

▶ [밀착카메라] 외면받는 '1천억 박정희 공원'…또 예산 투입 (1/1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841&pDate=20200115

: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전시관 추모공간 등을 보강하기 위해 구미시가 도비와 시비 50억원 책정했다고 보도함. 박정희 전 대통령 100돌을 기념 곧 준공예정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에도 160억 원이 들었다고 지적. 뉴스룸은 방문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반대에도 세금을 낭비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계획 당시부터 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세금을 투여했다는 점이 불만이라는 관람객 인터뷰를 내보냄. 세금낭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춤. 이런 논리라면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다양한 기념사업이 똑같이 세금낭비라는 얘기임. 그러나 뉴스룸은 현 여권 관련 대통령(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관해서는 세금 낭비에 초점을 맞춰 비판보도를 한 적이 없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박정희 폄훼’ 보도는 선거개입형 보도로 볼 수밖에 없다.

▶ '장애인 발언' 이해찬 비판하다…더불어 꼬인 한국당 (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83&pDate=20200116

: 상식적인 보도라면 막 불거진 이해찬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주제로 비판보도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압축 전달해 놓고 오히려 과거의 야당 대표 발언을 끄집어 내 비판함으로써 여권 편향적 보도를 함. 더구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실언인 반면,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성격이 다분함.

황 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대학 강연 때 나왔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52시간제를 비판하려다 한 말이었습니다.

그 발언 잠시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돈 쓸 곳이 많으니까 더 일해야 하는데 나라가 막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후에 당시 젊은층으로부터 '그러면 2030은 과로사하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 쏟아진 바 있습니다.

● **[팩트체크] "만 20세 되면 3천만원 지급" 공약, 선거법 위반? (1/1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834&pDate=20200115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제공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도했다. 이 법안은 비판 여론이 많고 논란이 큰 이슈임. 그러나 뉴스룸은 국가재정문제 등 실현가능성 (허위공약) 여부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야당과 국민의 지적한 "이건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다", "고발 검토하겠다" 등에 관해서만 팩트체크를 시도함.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줌.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는 민주당 정의당 등 여권 정치인과 정당에 관한 논란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상 여권에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임.

● 정권의 검찰개혁·검경수사권 조정안 문제점 지적없이 옹호 보도 일관

▶ 달라지는 검경 관계…경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 종결' (1/1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402&pDate=20200113

"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도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경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거나,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통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종결 시 부작용-예를 들어 성매매업소를 수사한 경찰이 운영진 A씨를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검사가 계좌내용 등 확인하니 A씨는 바지사장이고 진범이 따로 있을 경우,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재판 진행 중일 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할 수 없어 수사자체가 불가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여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정답인 것처럼 보도했다. 한쪽 면만 보도한 불공정 편파보도)

▶ '상명하복' 검찰에서 벌어진 전례없는 댓글 전쟁…왜? (1/1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862&pDate=20200115

(임은정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글과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글에 580여 실명 댓글이 이어지면서 정권의 검찰 무력화 작업에 대한 검찰 반발이 거세짐에도 이걸 단순히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검찰 내부망의 글과 댓글로 표출된 것"이라고 폄하했다. 뉴스룸은 "검사들의 댓글 설전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고 검찰 안팎의 개혁이 진행 중인데 검사들

이 내부 시선에 갇혀 있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의 비판과 문제제기를 조직이기주의로 몰아감. 검찰을 무력화에 올인한 정부여당을 위한 아부형 보도)

▶ '힘세진 경찰' 통제 어떻게?…발 묶인 경찰개혁 법안들 (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94&pDate=20200116

(뉴스룸 "경찰을 개혁할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거대한 경찰 조직을 둘로 나누고 수사는 외부인사가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도록 하는 법안, 또 민간인 사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습니다."라고 설명. 그러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경찰 개혁입법이 진짜 개혁입법안인지는 의문임. 정부여당의 경찰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핵심인데, 국수본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 뜻에 따라 하명 수사, 사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임. 경찰서장은 수사 지휘를 못하는 식물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뉴스룸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부여당안을 무조건 '경찰개혁 법안'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했다.)

● 해리스 미국 대사를 일방 비난하는 반미형 보도

▶ 정부 "대북정책은 우리 주권"…해리스 대사 발언에 '경고' (1/17)
▶ '북 개별관광' 견제한 미 대사…여 "조선총독인가" 비판 (1/1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274&pDate=2020011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273&pDate=20200117

"여당도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에 비유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보려는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견 표명은 좋지만 그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미국)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입니까?]"

: 국제사회(유엔)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 한미동맹 훼손, 외교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남북경협이라는 국제결의 위반 소지의 남북경협 추진계획을 내놓고 주한 미국 대사를 인신공격한 청와대와 여권 주장만 그대로 전하면서 반미 의식을 고취.

▶ "종북좌파 보도 사실이냐"…논란된 해리스 대사 발언들 (1/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325&pDate=20200118
"이렇게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일제 총독 연상' '일본계' '콧수염' 등 집권세력의 인종주의적 차별, 모욕, 인신공격 발언에 대한 비판은 없이 주한 미국 대사를 일방적으로 비판만 한 반미형 보도.

■ 3주차 뉴스룸 보도 특징

1. 검찰개혁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위한 무리한 검찰 인사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청와대와 여권에 불리한 이슈에 대해 비판보도 하지 않음.
2.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은 비판의 영역에서 제외된 성역임. 청와대발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전하는 수준으로, 뉴스룸은 권력 비호형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3. 뉴스룸의 고정코너 팩트체크는 여권 인사들 보호용, 방패막이용으로 활용.
4.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도는 부동산 가격 폭등 배후에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도사린 점은 전혀 짚지 않고 현상 보도와 정부의 대책 중심으로 보도. 그럼으로써 정부여당의 잘못을 가리는 기계적 보도에 그치고 말았다.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